

“단결·혁신·승리로 4기 민주정부 만들 것”

홍영표 민주당 대표 후보, 고향 전북 찾아 지지 호소

부동산 투기 잦아들... “투기꾼으로 판단되면 출당”
탈당 인사복당 관련 “허용은 없을 것, 원칙 지켜져야”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에 “실질 성과 내도록 최선”

“혁신, 단결,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위기에 강하고 성과로 말하는 홍영표를 믿어 달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첫날인 19일 고향 전북을 찾아 지역 발전을 약속하고 도민과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부족했던 그 지점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가 전북의 아들이었다”며 “의로운 항거의 정신이 바로 전북의 자긍심이다. 전북의 의로움을 전북의 아들홍영표가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홍 의원은 대선 승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책임지기 위해 3가지 공약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당 대표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당 대표 ▲민주적이고 소통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과감성에 대해 원내대표 시절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패스트트랙의 성공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또 홍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전북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해 전북 청년들의 꿈이 전북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동서횡간 철도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동서가 교류하는 경제활력의 기틀을 지원하고 미래 상용차 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활력으로 일으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영표 당대표 후보는 탈당인사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치적 이유로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재입당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비방침이 맞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면 국민들이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오만과 독선을 해결하고,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74명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의문이 있다면 10명이면 20명이면 출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전북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과 관련하여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일부 진행되는 것은 있으나 어떤 사업이라도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 현대중공업 재가동 그리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어 2012,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미안마 민주화 운동 지지 티셔츠 입고 본회의 출석

민주당 김윤덕 의원, 4·19 기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미안마 소녀의 마지막 외침(Every thing will be ok)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본회의에 출석했다.

김윤덕 의원은 착용한 티셔츠는 지난 3월 ‘Every thing will be ok’를 외치며 미안마 군부 탄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 ‘차일 신’의 티셔츠와 동일한 하게 제작된 것이다.

김 의원은 미안마 소녀의 마지막 외침과 절규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하며, 군부의 테러 행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안마 시민들을 위해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해줄길 부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많은 미안마 시민들이 군부에 의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마포에도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 수 있는 마포의 봄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마포의 민주화운동 및 국민통합정부 출범을 지지한다는 글에는 미안마에서 찾아온 시민들의 4만명이 넘는 좋아요와 29만4,000개가 넘는 감사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유호상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치유농업 기반 조성”

이기동 전주시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불투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치유농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기동(중앙, 완산 중화신·2동) 의원은 19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신청,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기동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 방역 관리 및 집단면역 체계의 완성 등 직접적인 해결 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코로나 불투의 극복 방안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고 농진청에서는 2013년부터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과학적인 치유 효과를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를 포함한 다수의 광역 지자체와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 역시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주시는 약 8천만 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집중 전략 사업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전주시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기동 의원은 전주시 치유농업의 선도적인 정책화를 위한 빠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주시의 농업 환경과 여건의 비교·검토 ▲치유농업 활성화와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체험·치유농장 신규 육성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 등의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김윤성 기자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해야”

조동용 도의원, “예외규정도 개선해야”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군산13) 위원장은 19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 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구축됐다”면서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 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



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한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3%p(상향)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합의 후

2020년 5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전북·광주·전남 지역과 부산·울산·경남권 지역은 합의 무산으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하다.
또한,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분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 강제성이 없어서,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19일 건의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학교공간 학생 밀집 최소화 대책 우선”

이명연 도의원, 본회의서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완경북지위원장·전주1)은 19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 학생 밀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



에서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곳이 학교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전북도교육청이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회변화와 현장의 목소리가 제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도교육청의 행정이 과연 교육부가 제시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우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공감하여 진정한 교육혁신을 추구한다면, 기존변경 전이라도 변화된 학생들의 체격과 사회 환경에 맞게 학교 실내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설치 확대 대안 모색해 나갈 것”

송지용 도의장,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와 간담회서 수소차 충전소 확충 방안 모색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더불어민주당·완주)은 19일 의정실에서 급속도로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주민주 의장 및 장정현 대외협력부장 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 의장 등은 이날 송 의장에게 “수소 시범도시 완주·전주에 상용 수소 충전소가 부족해 시민은 물론 버스 사업주도 불편을 겪고 있어 충전소 확충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버스는 공공재로 9년마다 교체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는 반면, 탄소배출의 주범인 대형트럭의 경우 보조금이 전혀 없다”면서 보조금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

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지용 의장은 “완주·전주 수소 시범도시의 핵심은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라며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 상용차업체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전북 상용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한계 보완·공동체 복원 뒷받침”

우범기 정무부지사, 누비온 등 도내 협동조합 찾아 현장행정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19일 협동조합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날 우 부지사가 방문한 ‘누비온 협동조합’(대표 김진규)은 스포츠 관련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모여 만든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온라인 미디어 운영, 스포츠 대회 운영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누비온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전북현대모터스FC의 공식 매거진(잡지) 발행 및 온라인 미디어를 운영하면서 축구팬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 알리기에 힘써왔다.
특히 지역 음악인들과 함께 전북현대 응원가의 음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주의 자랑 관소리의 대중화까지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 누비온은 설립 5년 만에 가파른 매출을 달성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명의 인원을 추가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진규 누비온 협동조합 대표는 “지역 기반을 둔 온라인 유통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로 매진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전북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애써 주신 누비온협동조합에 감사하다”며 “도에서는 협동조합이 공공과 시장의 양극단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심덕섭 전 행정부지사, 민주도당 노을대교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이 고창과 부안지역을 비롯한 전북도민의 수심만 숙이던 노을대교 건립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당은 1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위원장에 고창출신인 심덕섭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임명했다.
앞으로 노을대교특별위원회(약칭 노을대교특위)는 동 사업이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이에 따라 이를 제1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며, 아울러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예산변경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될말’

김정수 도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내 집 지키기 위해 동네 한가운데 폐기물을 테러한 것과 같은 일본 정부의 몰상식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19일 제38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정수(익산2·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규탄’ 결의안이 도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크나 큰 재앙이자 핵 테러라



며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해양 방출을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이자 핵 테러”라고 비난했다.
이에 도의회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결의했다. /유호상 기자